

요약

서울시, 가계부채 관련 전담부서 설치하고 ‘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센터’도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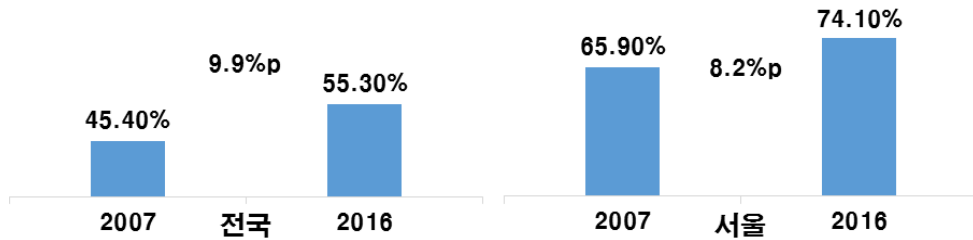
서울의 가계부채 현안 면밀히 파악해 위험성 진단하는 연구 필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때에 가계부채가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가계는 향후 금리인상 시기에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민간소비의 여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서울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기존 연구들은 전국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관련 현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역 차원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서울의 가계부채 현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계부채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서울의 가계부채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금리인상때 더 큰 영향

서울의 가계부채는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타 지역보다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가계대출이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에는 65.9%였으나 2016년에는 74.1%로 8.2%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은 45.4%에서 55.3%로 9.9%p 증가하여 서울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단순히 증가율 측면에서 비교하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율은 서울이 낮아 보인다. 하지만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이 74.1%로 전국의 55.3%에 비해 18.8%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림 1] (국내지역별) 총생산 대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비중

부동산가격 상승은 9개월간 가계부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효과

가계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등의 경제주체와 부동산시장,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울의 지역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서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을 병행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계부채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우선, 시계열자료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가계부채가 1% 증가하면 소득은 0.26%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1%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반응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9개월까지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세는 6개월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다 15개월 이후부터는 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정책효과가 점차 사라진다. 또한 대출조건 완화 등의 정책변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3개월간 일시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 이후 10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부채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는 점차 줄어들지만, 소득감소 추세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9개월간 가계부채를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후 부채증가에 대한 영향은 점차 감소하여 24개월 이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부채 보유가구의 63% “가계부채 원금상환·이자납부가 부담”

서울시 개별가구의 가계부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가구의 평균 자산은 69,943.9만 원, 부채의 평균은 5,266.2만 원(부채가 있는 가구로 한정한다면 평균 부채는 7,76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가구별 보유 부채를 살펴보면 담보대출이 4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용대출(23.6%), 신용카드 관련 대출(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은 464건에 평균 9,698.3만 원, 신용대출은 321건에 평균 2,068.5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126건에 404.8만 원, 기타 대출은 136건에 376.4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1] 부채 종류별 현황

(단위: %, 건, 만 원, N=1,000가구)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기타	없음
비중	41.0	23.6	9.2	10.0	32.2
건수	464	321	126	136	-
평균 금액	9,698.3	2,068.5	404.8	376.4	-

부채 보유 가구(678가구)를 대상으로 1년 전 대비 부채규모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42.8%)과 감소하였다(42.6%)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증가하였다(14.6%)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가계부채를 대부분 소득으로 상환(80.4%)하고 있었다.

[표 2] 응답자 특성별 부채 보유 가구의 1년 전 대비 부채규모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감소하였다	변화가 없었다	증가하였다
-	678	42.6	42.8	14.6

가계부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의 가계 부담을 살펴보면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스럽다 10.6%, 부담스럽다 52.2%)는 응답이 부담되지 않는다(전혀 부담이 없다 2.7%, 부담이 없다

8.6%)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채 보유 가구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로 인한 지출 감소 항목을 살펴보면, 여가 등의 문화비가 2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저축이나 금융자산 투자(22.0%), 식료품 구입 및 외식비(16.1%), 내구재 구입비(5.6%), 교육비(1.0%), 교통 및 통신비(0.7%) 등의 순이었으며, 줄이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5.4%로 나타났다.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의 연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2%, 없다는 응답은 87.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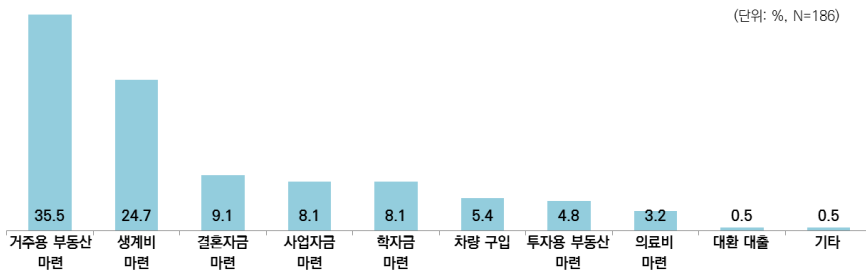
[표 3] 응답자 특성별 부채 보유 가구의 1년 전 대비 부채규모 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소득으로 상환	금융자산 처분	주거 축소, 주거지 이동 등으로 상황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처분 (거주 주택 제외)	상속이나 증여로 상황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하였음
-	678	80.4	3.2	3.7	1.2	0.1	11.4

가계부채 증가 주요 원인은 거주용 부동산·생계비·결혼자금 마련 순

서울시민들의 가계부채 전망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민 1,000명 중에서 1년 후 가계부채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 다가 43.6%로 가장 높았다. 증가를 예상(증가할 것이다 16.0%, 매우 증가할 것이다 2.6%)하는 응답이 감소를 예상(감소할 것이다 33.8%, 매우 감소할 것이다 4.0%)하는 응답보다 비중이 더 작았다. 총 186명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이 응답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이유는 거주용 부동산 마련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계비 마련 (24.7%), 결혼자금 마련(9.1%), 사업자금 마련(8.1%), 학자금 마련(8.1%), 차량 구입(5.4%), 투자용 부동산 마련(4.8%), 의료비 마련(3.2%), 대환 대출(0.5%), 기타(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가계부채 증가 전망 주요 원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서울수도 역할 재정립·지원방향 설정 필요

정부는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왔다.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서울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2년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후 서울시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은 없었다. 2012년 이후 6년이나 지난 시점 이므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주변 환경이 변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지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다양한 정책수단 개발...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엔 조력자역할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시적인 부문의 부동산과 미시적인 부문의 개별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거시적인 영역과 미시적인 영역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가계부채 문제의 특성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부문의 가계부채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동산 부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의 거시적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한계가구·영세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서울시는 부동산 등 거시적인 부문보다는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분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이들이 가계부채 문제로 받는 고통은 결코 작지 않으며, 개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인 부문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계 빚을 갚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조율하여 정책을 수행해나간다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서울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다. 전담부서가 있다면 정부와의 상시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정책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할 수도 있다.

정책접근성 높이게 자치구당 1곳 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25개 구에 1개 이상의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찾아가는 가계부채상담센터’의 운영도 고려해볼만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투기가 악성 가계부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일자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확보, 높은 금리 자영업대출의 대환대출 유도, 시중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